2025. 12. 12.(금)
제4차 본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1023

제출연월일: 2025. 12. 12.
제 출 자: 환경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붙임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음.

2. 감사실시 기간: 2025. 11. 14.(금)~11. 21.(금)〔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4호)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6호)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 일산동·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 ㈜킨텍스 ○ 고양산업진흥원 ○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 고양시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원	
				직 위	성 명
환경경제 위원회	7명	이해림	안중돈, 문재호, 손동숙, 신인선, 신현철, 최성원	전문위원 주무관 주무관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	최임구 한성구 윤여일 하세란 황용재 장성옥 소형준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부서)	감사 장소	내용	비고
일자	시간				
11. 14.(금)	14:00~18:00	○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 11. 15.(토)~11. 16.(일)			
11. 17.(월)	10:00~16:00	○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18:00	○ 고양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 18.(화)	10:00~12:00	○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회의실	감사	
	14:00~16:00	○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덕양구청 회의실	감사	
	16:00~18:00	○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회의실	감사	
11. 19.(수)	10:00~16:00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18:00	○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처, 바이오매스에너지처)	위원회 회의실	감사	
11. 20.(목)	10:00~16:00	○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6:00~18:00	○ (주)킨텍스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1. 21.(금)	10:00~15:00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	위원회 회의실	감사	
	15:00~17:00	○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위원회 회의실	감사	본회의 승인대상
	17:00~18:00	※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감사방법 및 증인(참고인) 출석

1) 감사방법

증인선서 ⇨ 업무실적 보고 ⇨ 질의·답변

2) 증인(참고인) 출석현황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일자리재정국(5명)	**국 장**	이도연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이순자	
기후환경국(5명)	**국 장**	정재선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자족도시실현국(5명)	**국 장**	김수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미래산업과장	김봉민	
농업기술센터(5명)	**소 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연구개발과장	양희경	
푸른도시사업소(5명)	**소 장**	이병영	
	녹지과장	김평순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기 관 별	직 위	성 명	비 고
덕양구청(6명)	**구 청 장**	한찬희	
	세무1과장	김옥님	
	세무2과장	양미례	
	산업위생과장	박순아	
	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청소농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청(4명)	**구 청 장**	박노선	
	세무과장	박상훈	
	산업위생과장	송진우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청(4명)	**구 청 장**	신영호	
	세무과장	김선미	
	산업위생과장	김일호	
	환경녹지과장	이영재	
고양도시관리공사(4명)	**사 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주)킨 텍 스(4명)	**대 표 이 사**	이재율	
	경영부사장	김환근	
	사업부사장	류재원	
	감사	엄덕은	
고양산업진흥원(7명)	**원 장**	한동균	
	부 원 장	공 석	
	고양투자청장	최아람	
	기획조정팀장	사공진	
	ESG경영팀장	이명균	
	미디어콘텐츠팀장	이유정	
	스마트테크팀장	박은희	
	넥스트창업팀장	김성연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4명)	**대 표 이 사**	정흥교	
	운영본부장	유신호	
	대외협력관	이영애	
	컨벤션뷰로본부장	이상열	

5. 주요 감사실시 내용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과 차이는?.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중단 과정도 심의·조정 없이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진행된 점은 큰 문제로 판단됨. 청년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중단되면서 청년에게 사회적 박탈감과 행정의 불일치성을 초래함. 중단 결정의 배경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모든 정책의 시행과 종료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에게는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청년 개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시가 주장하는 실효성과 재정 문제로 청년 대상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 최소한 미래패키지 사업이라도 실효성 있게 확장·운영되어야 함. 미래패키지가 청년기본소득의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25년도 고양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부 업체는 이미 이중 수혜를 받은 상황으로 보조금 사업이 특정 업체 중심으로 반복 운영되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거나 부적절한 파트너십이 형성된 결과로 판단됨. 고용 유지 여부 등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청년일자리보조지원 사업은 지원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함. 직무역량 강화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 기반의 매칭 구조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 ○ 바이오・콘텐츠・모빌리티 등 시비 매칭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청년 인센티브를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내용과 참여 업체 기준을 보완해야 함. ○ 2023~2025 고양시 일자리센터 사업이 매년 협상계약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으나, 연간 10억 원 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상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부적절함. 공개입찰 방식 도입이 필요함. ○ 2024년도 내일꿈제작소 실내조성 공사 중 통신・소방 공사가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계약 방식으로 판단됨. 공개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내일꿈제작소는 직영과 위탁을 혼합한 방식으로 청년 활동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자문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록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두 위원회가 실제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용개선자문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광범위하게 통합하는 것은 위원회별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됨. ○ 감정노동자 및 취약계층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통합된 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운영을 강화해야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내일꿈제작소 공사 및 위탁업체의 전문성과 공정한 선정 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상 감정노동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청년들의 주요 취업 분야인 병원·의료기관 등에서는 근무 특성에 비해 정주 여건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기숙사 등 정주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황 진단 및 수요 분석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연구용역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 비해 26개 사업·57명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사업 확장이 필요함.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사업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라이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작은 채용의 날’은 규모가 작고 참여기업 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짐. 단순 미화·단기직 중심이 아닌,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개선해야 함. ○ 노동권익센터는 수탁기관 변경 이후 운영점검이 필요하며, 예산부족으로 불안정성이 크므로 안정적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자리재정국 (소상공인지원과)	○ 덕양구청 인근 청취다방 이전 후 상담실적이 급증했고 노무사 1명이 371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하므로 노무사 충원 및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 장항, 화정 이동노동자쉼터는 수용인원 대비 과밀 사용으로 휴식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현장 점검 후 환경개선 또는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함. ○ 노동권익센터 상담의 상당수가 부당해고·근로기준 위반 등 법률적 대응을 요구하는 복합적·전문적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인력으로는 법률 상담의 깊이와 신속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노무사·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여 노동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동아카데미 교육은 계층별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제공해야 하며, 후임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 내년도 고양페이 지원 예산 및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홍보 부족으로 상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지역 내 현수막 설치에 의존하는 등 홍보 방식이 매우 제한적임. 구청 게시대, 현수막,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인들이 제도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전문성 강화, 고용불안 해소,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중장기 계획이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필요함. ○ 사회경제연대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반 확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임에도, 현재까지 중장기적 방향성과 실행 로드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양페이의 경우 집행률이 높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많은 시민들은 연초 고양페이만 미지급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양페이 미지급 등 예산편성 철저 당부함. ○ 공정무역도시라는 슬로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집행 및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일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도입 시 ㈜에코미스티를 특허 산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방식이 일반입찰 경쟁방식과 달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임. 냉방효율, 가성비 등 수의계약 구매 전 사전에 다른 제품이나 사업 방식을 고려한 적이 있었어야 함. ○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 매출의 증감유무, 폐업률 등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게 경영컨설팅, 디지털 전환교육 등을 의무화해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협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 상권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기적 개최와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라페스타(쇠퇴지역)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에 공작물 설치나 추가적인 라이트(Light)시설 등 유지보수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은 유지보수 관리비용까지 추산하여 사업비로 편성해야 함. ○ 일회성·임시방편·행사성 노후화 및 쇠퇴지역의 상권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쇠퇴지역(라페스타)의 공실률이나 상권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의 행사 진행 방식은 해당 상권의 수요와 주요 소비자층의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장단점 분석 및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수요맞춤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과 위탁운영 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임. ○ 고양시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이후 예산 부족으로 각 구의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덕양구, 동구, 서구 각각의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모사업들을 주체적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주기 바람. ○ 고양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떨어져 시민들의 사용 유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양시 실제 이용 수요와 소비 패턴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센티브 한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양페이 가맹점에 대한 내용 및 고양페이와 관련한 안내 페이지의 접근성이 낮아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 개선이 필요함.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2025년 경기도 세정·세제 연찬회 용역은 수의 1인 견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경쟁입찰을 통해 질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던 업체만 계속 선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내 업체끼리라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할 것임. ○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도비를 연찬회 용역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주요 심의 내용과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단 1회만 개최되어 심의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연 1회 개최만으로는 정보 확인 및 심의평가가 불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전에 별도의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평가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정과 관련한 자료의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타지자체의 기준과도 비교해 보고 외부 인사가 느끼기에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담보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했어야 하나, 정성평가에 다소 의존함. 이러한 기존의 방식 개선 및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미흡함을 보완해 주기 바람. ○ 고양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장항습지 등 생태 교란종이 많이 퍼져있음.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란종 제거의 경우 5월~10월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함. 제거 후 사후점검은 하고 있는지? ○ 환경정책과 임기제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립 발표 시기가 언제인지? 2025년 8월 언론간담회 진행 당시 예산의 한계로 경기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에서 36%를 줄여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는데 목표를 줄이는 것이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과장된 보도자료로 인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언론간담회 자료 내 고양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민참여형 사업이 있는지? ○ 장항습지생태관의 관람 실적이 작년 3개월(2024. 10.~2024. 12.) 실적과 올해 1년 실적이 비슷한 이유는? 시민들의 관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충원과 함께 적극적인 부서 방안이 필요함.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와 태양광 발전허가 현황은? 설치 시 관련부서 협의 여부는? 태양광 설치의 경우 발전허가증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하여 설치를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는데도 왜 발생하는 건지? ○ 5월에 개정된 전기차 보급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 사항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전기차 보급 현황은? 이 사항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명확한 안전에 대한 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라도 정상작동 되는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음. ○ 미니태양광 현황에 대해 보급 건수가 아니라 발전량, 설립성능에 대한 결과를 현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가뭄이나 결빙 때 살수차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미세먼지 방진창 사업의 경우 사후점검이나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송포, 가좌, 대화마을 악취문제에 대해 관련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시정질문 한 결과 이동환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못 하고 있었음. 시장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서의 측정은 업무시간이지만 실제 측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측정에 대한 타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구산동 양돈농장 악취저감제 사업 지원을 도비사업이 아닌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 전기차 보급 활성화 외에도 수소버스 활성화도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확대되어야 함. 이에 따라 향후 수소버스 지원 계획은? ○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매년 같은 2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음. ○ 경기도 RE100 사업(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의 행정 지원 절차와의 차이가 있는지? ○ 태양광사업 관련, 담당 과장님도 즉답하지 못할 정도로 국·도비 편성이나 사업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시민들이 신청하기에도 너무 어렵지 않은지? ○ 민선8기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주민들과 같이 진행한 사업 어떤 게 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가게가 작년 대비 26개에서 15개로 감소한 이유는? 가게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자원회수량은 변함 없는지? 일본 국외출장 시 자원순환가게 형식을 센터로 개소하여 다양한 자원순환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고양시에 접목시켜 자원순환 가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 시 자체예산으로 RFID 설치사업으로 인해 장관표창 수상한 것에 대해 격려함. 향후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지? 환경부 지침의 36.5% 감량율에 대한 타당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과 안내가 필요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길 바람. ○ RFID는 음식물 감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가정마다 음식물 처리기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길 바람. ○ 환경부에서 내년 1월부터 직매립 반입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한 대응은? 광역 소각장 추진 현황은? 소각장 설치의 경우 자체 설치나 광역화 방식을 떠나서 고양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야 함. ○ 소각장 추진에 대해 고양동 지역주민에게 안내하거나 설명한 사항이 있는지?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고양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시 공유하여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인선ENT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맞는지? 허가를 득한 부서는?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를 담당해야 할 부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허가조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지 않은지? 인선모터스도 운영되고 있는지? 1세대 전기차 폐배터리가 향후 조만간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에 대해 인선모터스가 폐배터리를 불법으로 매립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이 필요함. ○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를 왜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는지? 위법한 행위를 하는 행태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기후환경국 (식품안전과)	○ 음식물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은? 열무축제의 경우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하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준비하면서 일산열무를 더욱 홍보하고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측과 협의를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전문판매업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선정기준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지원 용역 내용은? 현장코칭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이 필요하고 이 외 자발적으로 음식점들이 위생관리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음식물특화거리 관련 조례 제10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현황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형물의 경우 타지자체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올해 추진된 용역에서 나아가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산테크노밸리 추정사업이익률 변동 시 의회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보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전 요구한 자료 제출도 지연되고 있음. 공사채가 수백억 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는 마땅한 검토와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인지와 대응이 부족함.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세, 사회·경제 요인, 국제정세 등 필수 요소에 대한 검토가 부재한 채, 모든 책임을 GH로 돌리는 모습임. 또한 해당 건은 2018년부터 자료 제출을 재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행정은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책임 있는 집행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줌. ○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현재 계획된 메디컬·바이오·방송 산업 외에 추가 업종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입장 제시가 필요함. 본 사업의 최초 분양은 사업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바로미터임에도, 초기 목표했던 산업 방향성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임. 이에 따라 분양 전략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임. ○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관련해 결과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고양시가 얻게 될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GH가 기업성장센터 착공 한 달 이내에 분담금을 입금할 예정인데, 이 이후에는 경기도가 사업 책임을 고양시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됨. ○ 한류천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방적으로 중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단된 상황에서 고양시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복개 여부와 이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경기도의 도의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이에 따라 경기도와의 재정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532만 평으로 축소되어 수용된 상황에서, 잦은 면적 축소 요구와 보완 사항이 언제 해소되는지 의문임. 송포·가좌/장항·대화 등 지구분할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인지, 당초 2개 지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1개 지구로 통일했던 방침이 다시 변경된 것이 확정적인지 명확하지 않음. ○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전문가 자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면적·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음에도, 시가 532만 평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비율을 기준으로 면적을 재산정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함. ○ 절대농지의 83%가 사실상 축사·우사·재배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고, 인근에서도 방송영상밸리 등 여러 개발용지를 농지에서 전환해 확보한 사례가 있음. 그렇다면 국립식물원, 스마트팜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림부 설득 또는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부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 고양시의 절대농지 확보 문제에 대해 농림부 등 상위부처는 우량농지 해제가 이미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인천·안산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고양시는 경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제자유구역 추진에 실질적 제약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수직형 스마트팜 단지, 국립식물원 조성 등 농지해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상위부처와의 협상이 실제로 원만하게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함. 애초부터 현실적인 여건을 갖추고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임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함. ○ 최근 기업유치 성과와 투자실적이 전무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한 부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정확한 MOU 체결 건수와 실제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성과와 관련해 정확한 수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시된 220건이라는 수치가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총 220건 중 계획 대비 107% 성과 달성이라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중국 북경자동차의 4조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보도와 관련해, 당시 ㈜지오엠에스디 투자협약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이어서 제기된 중국 북경자동차 투자협약 체결 관련 반박보도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함. 해당 보도들이 혼선을 야기한 만큼, 사실관계와 행정의 공식 입장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가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국 북경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이후, 실제로는 ㈜지오엠에스디와의 협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현재 판단이 무엇인지 묻고자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지오엠에스디가 북경자동차의 생산기지 구축과 관련해 고양시 외 여러 지자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신문기사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사안을 북경자동차와의 협력으로 오해하여 4조 원 규모 실적을 발표한 것은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실수임. 그럼에도 즉각적인 해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신뢰손상을 더욱 키운 문제임. ○ 고양시는 2024년 3월 27일, 북경자동차와의 업무협약 관련 정정·해명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명보도가 존재하는지 의문임. 당시 보도자료의 작성 경위, 검증 과정, 외부 전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 고양시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기업 지원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당부함. 고양시가 기업 운영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 지원,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기술닥터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 1·2단계 지원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3단계 지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진된 사례가 없음. 이는 효율성의 문제인지, 예산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3단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단순 실험단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으며, 고양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작동해야 함. ○ 최근 고양시 우량기업 또는 정착을 희망하는 기업들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이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고양시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 특히 매출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기업들이 고양시를 떠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시는 기업 정착을 위한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강구해야 함. ○ 고양시는 제조기업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관리체계,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기업들의 현황, 성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부서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자족도시실현국 (전략산업과)	○ 킨텍스가 지난 3월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였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모집공고 → 평가 → 주주총회에서 경기도·코트라·고양시 3개 주주기관 의결을 거쳐 선임되었음. 그러나 6개월 동안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발언자를 비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3개 주주기관과의 사전 동의를 거쳐 공개한 것인지 의문임. ○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하자고 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임원추천위원회는 주주기관 추천을 받은 6명의 중립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에도, 고양시 추천 위원 중 1명이 ‘전시컨벤션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은 심의비가 지급된 반면 이 인원만 지급되지 않은 점은 사실상 공무원이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음. 해당 인원의 전공·경력·전문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해당 위원이 특정 지원자에게 99점의 최고점수를 준 사실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 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평가항목 중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및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듯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후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는 어떻게 누굴 추천한 것인지 개인정보로 말하지 못한다는 게 납득이 어려움. ○ 현재 감사로 선임된 자에 대한 평가표에서, 상담사·연구소 등 기존 경력 대비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된 것은 고양시가 기업경영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 전략산업과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며, 추천위원은 평가의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향후 필요시 증인 출석 또는 추가 소명이 필요함. 시에서는 임원추천 과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킨텍스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받은 이번 수상은 평가 기준이 2024년도 실적임. 현재 감사는 2025년 4월에 부임한 상황으로, 수상은 감사가 온 이후의 성과가 아니라 감사 부임 이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감사 부임 이후 성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3월 31일 주주총회 안건은 영업보고·감사 선임 등 중요 안건임에도 시장 결재가 누락되어 있음. 2021년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결재가 누락된 사례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쪽지보고로 갈음된 이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유, 그리고 내부 결재 절차가 왜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 전결규칙에 따라 2020년 4월까지는 시장 결재가 이뤄진 기록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는 쪽지보고로 대체된 상황이 지속됨. 특히 3월 31일 주주총회 안건에는 감사 선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약 5년간 결재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 외로 진행된 사항임. 중대한 안건을 부서 판단만으로 결재 없이 처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 쪽지보고는 3월 28일에 이뤄졌으며, 시장은 그 시점에 주주총회 안건(영업보고, 감사선임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임. 단 3일 만에 이러한 중대한 안건들이 결정된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이며, 향후에는 결재 및 사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위원 A가 3~4회 추천된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 전시컨벤션의 미래가 달린 임원추천과 위원회 구성을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원 E 역시 전시컨벤션 전문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참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공무원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로 전문성과 관련 이력을 갖춘 인물이 적정하게 추천되었는지 의문임. 또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보면 현재 감사로 임명된 엄덕은 후보에게 안녕연구소·상담사 등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수가 부여된 정황이 있어, 이는 고양시가 기업경영능력과 조직운영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감사로 선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됨. 더불어 전략산업과와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 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실명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공개를 거부해야 할 사안도 아니며, 향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임원추천 당사자가 평가 과정의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증인 출석 또는 직접 소명이 필요함. 이에 시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선정 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LIH 국내 법무법인 및 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CIC 입주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보건원 분원 유치에 장애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LIH 분원이 실제로 고양시에 어떤 기여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고양시 차원의 실질적 효과와 기대되는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의료데이터 통합과 관련해 국립암센터의 데이터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가 LIH 분원 유치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협력 또는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시의 설명이 필요함.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의료데이터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LIH 분원 유치와 결합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연계가 실제 고양시의 기업유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고양시 마이스(MICE) 산업 유치 및 행사 실적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속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적인 하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양컨벤션뷰로의 국제박람회재단 통합 과정에서 인력·채용·통합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통합 이후 사무실 및 업무공간 확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통합이 효율적으로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기존 컨벤션뷰로에서 통합과정에 따라 채용된 인원들의 보수 수준과 고용 승계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특히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통합 이전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우려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의 통합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마이스산업과 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통합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정비와 지원 강화를 요청함.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 EBS국제다큐영화제는 지원이 되고 있으나, DMZ다큐영화제 예산은 전액 축소된 상황임. 두 영화제가 모두 평화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공유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공동 또는 병행 지원이 가능한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대규모 제작사가 입주하려면 부대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이 필수적인데, 현재 어떤 추진 상황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아쿠아스튜디오의 명성·제작환경 개선·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UAM 산업 활성화 및 실증사업 추진과 관련해, 상위부처의 미온적 태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협약체결·예산 확보 등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된 것인지 의문임. ○ UAM 실증사업 중 버티포트 착공 현황은 어떠한지? 기체도 없는 상황에서 공사 착공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향후 기술력 확보, 기체 운용계획, 안전관리 대책 등이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타 지자체 수상교통 사고처럼 안전·소음 등 추가 위험이 우려됨. ○ 고양시가 UAM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5km 이상 운항 가능한 기체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재 헬기를 대체할 상용 교통수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2025년 상반기 UAM 실증사업에 대한 기체 운영 보도 이후 후속 홍보와 보고 내용이 매우 부족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대표이사 연봉이 대폭 상승(약 2,200만 원)한 사유와 근거는? 보수 규정에 명시한 연봉과 성과계약서 상 책정되어 있는 연봉 중 어느 것이 우선이지? 형평성을 명분으로 대표의 연봉을 인상했다면 타 출연기관 대표는 왜 인상되지 않은 건지? 전임 대표의 경우 공무원 출신으로 인해 호봉이 인정되어 인상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원한 사항이 있는지? 공릉천 인근에 있는 시금치 농가의 경우 큰 피해를 입음. 피해복구금액의 경우 산정 기준은? ○ 농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거처 마련을 위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는지? ○ 동물교감 치유문화제와 관련하여 고양시가 동물복지 선호도시로 가겠다는 방향성은 알겠지만,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음. 사업비가 첫해부터 지금까지 시비 2,100만 원으로 동일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와 관련하여 유기된 반려동물을 기증받은 단체에서 개인에게 입양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기증받은 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보내며 사진을 증빙하는 등, 입양 후 사후관리까지 신경써 주길 바람. ○ 고양시가 학교급식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모범사례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 바람. 경기도 조달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생각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친환경 급식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요청함. ○ 학교 급식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농가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학교 급식 관련 예산 미확보와 관련한 민원의 요점은 예산 미확보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가 모르쇠 방식으로 답변했던 것이 문제였음. ○ 구산동 돈사에서 사료 미생물제 금액 지원과 관련해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부담 비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가능한 사항인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악취 저감과 관련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 치유농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으로 인해 농가들이 제한을 받고 있음. 특화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한 운영을 해주길 바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2024년 누리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인 보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건과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성사동 425-1, 425-2 쌈지공원 조성 요청과 관련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유휴부지이므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원흥동 563-10, -12번지에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대궐약수터 벤치 및 운동기구 보수 현황은? 시설을 설치한 구청 산업위생과와 논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어린이공원 노후화 놀이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향후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계획은?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자체예산의 부담을 줄여야 함. ○ 조경공사 이후 고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 2025년 11월 10일까지 인선ENT가 산지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 산지복원을 제출했던 5단계 복구계획 중 현재 3단계도 진행되고 있지 못함. 애초 당시 5단계로 구분하여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인선ENT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지? 인선ENT는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가설건축물 허가를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푸른도시사업소 (덕양・일산 공원관리과)	○ 공원관리 사용료가 작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고양시 관내 정비가 잘 되어있는 공원을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속의 청소용역원 분들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서구청 환경녹지과 용역원 분들이 공원관리과 휴게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지? 구청 환경녹지과 소속의 청소용역원 분들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관리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026년 전에 현실 가능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구청 청소용역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26년 푸른도시사업소 청소용역과 구청 청소용역 용역원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관내 전정작업과 제초, 예초에 대한 횟수가 감소되었는지?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낙엽을 정리하는 정비기계(송풍기)에 대한 소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 생태하천과에서 공릉천 발물놀이터 설치 후 다소 미흡했던 운영·관리에 대해 덕양공원관리과에서는 2024년 덕양2지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를 수행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협업한 적 없는지?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경험에 대한 공유과 협력이 필요함. 당시에도 개장 이후 예측하지 못한 관리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했음. 바닥 코팅 문제에 대한 향후 조치 사항은?
	○ 성라피크닉장 이용 현황이 감소한 이유는? 주차장과 피크닉장 예약이 분리되어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음. 주차장 면적이 19면으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인근 상가안내도를 설치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마상공원 내 비호정 국궁시설 관리에 대한 체육정책과 이전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도 아직 이관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관이 필요한 사항임.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정발산 전망대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큰 화두임.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는? 주민들의 설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치 요구가 사전에 있었는지?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자문받거나 검토 받은 사항은 있는지? 전망대 사업을 명분으로 받아온 특조금에 대해 2회 추경 때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사항은 변함없는 사항인지?. 전망대를 설치하였을 때 예상되는 유지관리비 추계는? 도비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까지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추진하지 못할 경우 도비를 환수하거나 패널티가 있는지? 6월~7월 사전 주민의견조회 추진 방식과 결과는? 향후 정식적인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해야 함. 경남 빅트리 인공나무 전망대와 같은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함. 성남 트리타워 전망대도 착공 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지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호수공원 내 반복적인 민원(풀 깎기 11건, 바닥 포장 파손 수리 17건 등)이 발생하는 건 유지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순찰이나 점검 실태가 어떠한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있는지? ○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대해 시장님께서 담당부서에 확인한 사항이 있었는지? ○ 호수공원 북카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 당시 쉼카페로 변경되어 추진됨. 호수공원 북카페 추진과 관련하여 2024년 겨울부터 도서관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과 중복된다는 입장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함. 사업중복이라는 입장문은 현재시 홈페이지에는 삭제되었으나 공립 작은도서관 폐지와 관련한 보도자료에는 현재에도 중복된다는 내용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로 보도되어 있음. 쉼카페 추진은 기존 북카페 사업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현재 추진 현황은? ○ 고양생태공원이 호우 시 돌길이 올라오고, 데크가 파손된 곳이 곳곳에 발생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호수공원 자전거길 추진 현황은? 용역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학괴정을 재건축할 의지가 있는지? ○ 정발산 데크길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호수공원 화장실 전망대 자전거 조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설치 배경은? 무조건 이 조형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향후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해야 함. ○ 호수공원 내 보수가 필요한 벤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함.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단체 선정 기준은? 보조금 단체에 대해 성과실적들을 살펴보고 선정하는지? 단체들의 단순 성과실적들만 보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 지원 기준은? 단체별로 예산 지원의 규모가 다름. 예산 규모만큼 단체들이 그만큼의 성과를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도출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함. 전문적인 단체와 함께 소규모 하천 정화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구분하여 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 ○ 공릉천 발물놀이터의 개장식을 친수사업 조성 준공 전 일주일 전에 개최한 이유는? 개장을 급하게 하다 보니 호우에 대한 대응 관리 부실상태가 드러남. ○ 풍동천 뒤 취락지구 내 소하천이 여름 호우마다 범람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 창릉천 인근의 경관녹지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 주기 현황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현재는 점검시기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양한 점검 방식이 필요함. 골프장 내 농약 구매 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봉 회사의 업종형태는? 선별파쇄업과 하천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업체에 대해 허가 방식이 아닌 신고 형태로 인해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담당부서의 고민, 대응 및 조치가 필요함. ○ 2022년 국가의 통합하천사업 공모 당시 지방하천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었는지? 2024년 국비 지원 불가 통보 당시 고양시 대응은? 환경부의 재정 지원 불가 사유는? 당시 보도자료에는 국가 세수 부족으로 보도되어 주민들의 반발을 샀음. 이 사업을 위해 추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 창릉천 인근의 호우 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경기도, 환경부)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담당부서는 언제부터 노력했는지? 창릉천이 5개 하천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하천 승격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다소 우려가 큼. ○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에서, 덕양구의 음식점 총 업소 수가 얼마인지,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함. 현재 약 13명이 7천 개 업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인력 구성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설명해 주기 바람. 또한 위반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 중에서도 직접 확인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담당 인원이 적더라도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결과가 업소별로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처분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에 따라 수위가 결정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 대궐약수터 벤치 및 운동기구는, 보수·보강 조치가 현재까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반복 위반 업소 중에서 반복 위반을 하는 업소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함. 반복 위반 업소가 폐업 후 업종만 변경해 다시 영업하는 경우, 추적이 가능한지? 또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등록 등 지속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다고 생각하며, 반복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위반 일시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함께 요청함.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 산업위생과의 농지 불법행위 관리, 환경녹지과의 비산먼지 발생 및 영업장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개선을 당부드림.
	○ 소나무 재선충 피해 면적의 최근 추세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를 요청함. 또한 드론을 활용한 예찰 등 다양한 방식의 예찰 활동 강화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람.
	○ 덕양구 역시 악취 민원이 많은지, 악취 배출구의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함. 아울러 돈사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례에 대한 설명도 요청함.
	○ 창릉천 유채꽃 축제는, 2025년 축제 당시 시의회와 담당자조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사전 고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함. 또한 실제 조성된 유채꽃 면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는? 더불어 마을기업을 살리고 육성하기 위해 ‘마을기업법’이 제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함.
	○ 북한산 인근 수해 복구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신속하게 복구 조치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 창릉천 일대에서 오・폐수(기름띠)가 흐르는 현장이 목격됨. 생태하천과와 환경녹지과의 현장 점검을 요청함.
	○ 공동주택・아파트는 자체 관리가 양호해 큰 문제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없으나 일반주택과 신축 단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 인력 배치 등 집중 관리 방안을 요청함. 무단투기 CCTV가 사람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쓰레기 감시원이 10월까지만 근무한다면 동절기 관리 인력 부재 문제에 대한 대응도 요구함. 또한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은 통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계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덕양구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CCTV가 총 몇 대 운영 중인지, 고정식 CCTV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는지 확인을 요청함. 또한 고정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용역과 원격방송 감시카메라 임차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명이 다름에도 예산이 동일하고 동일 업체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부서의 판단과 해결 방안 제시를 요구함.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현수막 게첨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함. ○ 주교동 등 동네 환경미화 업무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업체의 청소 미흡 문제에 대한 부서의 견해와 개선 의지를 묻고자 함. ○ 용인시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청소기 사례처럼, 넓은 흡입구를 갖춘 이동식 청소기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구청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 농지실태조사는, 농지 내 불법행위자 실태조사 및 처분명령 자료에서 ‘건수’의 단위가 사람 수인지 필지 수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농지처분명령 건수는 24년에서 25년 사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실태조사원이 몇 명으로 운영되는지,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활동했던 조사원이 동일 지역에 다시 선발·배치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사유지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함.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 관내 식품위생업소 전체 개수가 얼마인지, 이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함. 식품관리원이 10월까지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후 기간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함. 올해 8월 민원을 제기했으나 자료에 누락돼 있어 자료 인쇄·작성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 바람.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2회차부터는 더 강화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조치 이후 재발 시 사후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청함. ○ 통신판매업 신고와 조정 현황에서, 연간 신고건수에 비해 조정건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길 바람. 폐업 미신고 업체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이 경우 소위 ‘먹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연 1회 말소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 ○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일시를 함께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 행정처분이 종료되면 구청의 관리 역할도 종료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6개월 이내 점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지속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적 관찰과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업위생과의 농지 불법행위 관리, 환경녹지과의 비산먼지 발생 및 영업장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 개선을 당부드림. ○ 정발초등학교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학생들 등·하교 골목에 적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칸막이 설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함. 사유지라 직접 조치가 어렵다면, 건물주·상가 측이 스스로 정비하도록 설득하는 방식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CCTV가 작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非)아파트 지역에서 무단투기 문제가 매우 심각함. 이에 대해 부서의 판단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의 통장·주민자치위원회와 협업해 TF팀 구성 및 '깨끗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 추진을 제안함. ○ 백마학원가 건물 뒤편에 대량의 쓰레기 적치가 확인되어 신속한 정비 조치를 요청함.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방안으로, 과태료 명시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오래 설치돼 글씨가 희미해진 기존 현수막은 점검 후 교체해 주길 요청함. ○ 용인시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청소기 사례처럼, 넓은 흡입구를 갖춘 이동식 청소기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구청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람. ○ 공원 블로워는 엔진식과 충전식이 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엔진식 블로워 사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엔진 특유의 큰 소음으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민과 청소 인력 모두를 위해 소음이 적고 안전한 충전식 블로워로의 전환을 제안함. ○ 부서 용역원이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면서 불편이 발생하였을 때 공원관리과와 이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근무지와 휴게실의 거리 문제였는데, 이후 개선을 위해 공원관리과와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내년도 휴게실 임차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 가능 여부와 이미 요구한 예산이 있는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 증액 폭은 어느 정도인지, 추가 임차 장소를 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일산동구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매년 1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불법행위 감시 방식이 CCTV 위탁인지, 직접 순찰인지 명확하지 않음. 환경정비 용역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기존 감시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감시 인력 2명이 주중 몇 시간, 어떤 구역을 순찰하는지 자료상 확인이 어려우므로 세부 정보를 요청함. ○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로 저녁 시간에 발생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효과가 낮은 상황에서, 현재 예산 규모가 타당한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또한 이동형 CCTV가 있어도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CCTV 증설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서의 판단을 묻고, 계도 과정에 실버인력 등 인력을 투입하는 대체 방안 마련을 요청함.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	○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특히 행정처분 과정이 어떤 절차로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 드림. 연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수에 비해 관리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리 공백 문제도 우려됨. 또한 행정조치 이후 동일 위반이 재발했을 때 어떤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 매 계절마다 주엽역 데크와 인도 연결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별개로 구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공사 시공업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현재 무상 하자보수 적용은 불가능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 일산서구 개청 20주년 당시 진행된 기념식수 식재 행사가 향후 매 10주년마다 반복적으로 추진될 계획인지 확인이 필요함. 기념식수는 해당 자리에 지속적으로 남아 지역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조차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행사 자체에 대한 홍보도 전무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청소 용역원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이동식 CCTV 설치 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 유형도 점검해야 함. 특히 덕양구처럼 CCTV가 있어도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서구청은 어떤 방식으로 적발·처분하고 있는지, 최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함. 아울러 CCTV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빈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상 캠페인 등 예방 중심의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대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용인시 사례처럼 환경미화원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넓은 흡입구의 이동식 청소기 도입을 구청에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근무시간과 인원도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람. 무단투기를 계도하는 등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함. ○ 최근 악취 담당 직원의 퇴직이 잇따랐는데 업무 공백 없이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기록표 역시 주민 체감도와 큰 차이가 있고, 일부 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10년 가까이 지속된 민원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 돈사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시정질의를 진행했음에도 시장께서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구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일산서구청에서 구민을 대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요청 드림. 또한 제출된 악취 시료채취 기록표에 기재된 ‘단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함께 요구함. ○ 장원평촌 인근 전지작업 요청과 관련하여, 차도 가까이 식재된 나무의 가지가 아래로 처져 농기계와 차량이 긁히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전지작업을 요청 드림. ○ 법곳동 지하차도 대량 담배꽁초 투기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해당 지하차도에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대량 투기가 반복되고 있어,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을 요청함. ○ 대화천 도로 다리 하부 경사로 타일이 깨지고 패여 있어 보행 안전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함. ○ 농지 성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최근 농가들이 경쟁적으로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우천 시 성토된 흙이 배수로를 막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일산서구, 그중에서도 가좌동 일원은 지형상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요청 드림. 또한 파손된 농로의 보수가 시급한데, 우천 시 흙탕물로 인해 파손 지점 식별이 어려워 차량·농기계·보행자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최근 몇 년간 줄어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3년에 비해 24년·25년 실태조사 건수는 감소했으나 조사면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큰 필지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수치가 가능한지 확인이 요구됨. 아울러 실태조사 기간제 조사원의 인원 현황, 조사원 모집 시 지원 규모와 자격요건, 그리고 일부 조사원이 차별적으로 눈감아 준다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관리·감독 강화도 함께 요청 드림. 지속적으로 동일 지역을 조사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람.
고양도시관리공사	○ 그리기 대회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참여 후기는 어떤지? 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 시설에 대한 운영 사항은 고양시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작년대비 일평균 소각량이 감소한 이유는? ○ 전년대비 소각장 밸브 보수 이후 추가적인 고장 발생 현황은? ○ 광역소각장 추진하는 동안 고장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수시적인 정비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 최근 소각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음식물 처리 작업에 대해 애로사항은 없는지? 광역소각장 추진 시 음식물 쓰레기 분산처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 바이오가스 현황은? ○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시설 내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없는지? ○ 외부기관 방문이나 시민들의 견학을 위해 낙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와 개선이 필요함.
㈜킨텍스	○ 지난 행감 시 지적한 킨텍스 주차 문제와 관련해, 기존 4,260면에서 올해 5,795면으로 주차면수를 확대하여 주차 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소하였음.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셔틀버스 운영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 킨텍스 주차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연 7,000여 명 인력 운영을 위해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무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자의 안전 확보, 한랭질환 예방, 계절별 유니폼 제공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음. ○ 또한 VIP대기실 명칭 변경 건의사항은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VIP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수정한 바 있음. ○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제기된 경기도와 고양시 간 중복감사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는 상호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 그 결과, 경기도와 고양시가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감사는 해당 일정에 따라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람. ○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 과정과 임원선임의 공정성 확보가 충분했는지 의문임. 서류심사에서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엄덕은 감사의 선임이 과연 공정한 결과라고 보는지 묻고자 함. 이러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공개가 반드시 필요함. ○ 킨텍스는 고양시민의 자산임을 다시 강조함. 교육자・상담사로서의 경력으로 감사직에 지원한 엄덕은 감사가, 감사직 수행에 필수적인 경력 증명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피아노학원 운영, 가야금 전공, 파주시다문화상담센터 팀장 근무,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활동 등 제시된 경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감사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충분한지 의문임. ○ 특히 감사 선임 이후에도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동안 경력 관련 정보 공개를 지연한 사실은, 공공기관의 감사를 맡은 인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 킨텍스 감사로서의 자질·적격성·투명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 감사는 본인의 대표 경력을 일관되게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원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저의가 의심됨. 공공기관 감사로서 요구되는 투명성과 윤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 킨텍스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당사자인 감사 스스로 감사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의문임.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함. ○ 킨텍스의 미래를 위해 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임. 전략산업과를 통해 확인한 올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위반’이 동시에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가 총책임자의 위치에서 어느 사안이 더 중대한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점, 감사팀의 명확한 감사 기준이 있는 것인지, 혹은 감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됨. ○ 킨텍스에서 사후 연차 승인 사례가 존재하는지, 감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감사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 연차를 다음날 상신”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했다고 하나, 연차 승인 부서에서 “왜 이제 승인하냐”라고 지적할 경우 그날은 결근인지, 연차 사용인지조차 답변하지 못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감사결과보고서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 국외출장 후 14일 이내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감사라면 이러한 사항까지 점검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은 문제가 큼. 특히 해외출장 일정(2월 2일~2월 8일)이 존재함에도 감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감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고서 작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감사 자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 임원심사평가 항목은 6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진력·리더십·전문성 등을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우려됨. 엄덕은 감사는 자기소개서에서 “조직 경험이 없다.”고 작성했음에도, 평가항목 중 관련 분야 전문지식·기업 경영 경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은 정당성을 의심케 함. 평가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평가 기준이 투명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평가표는 명확히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함. ○ 킨텍스플러스를 통한 위수탁 구조라 하더라도 미화원·보안요원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킨텍스의 얼굴’임.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기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요청함. ○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제1·2전시장은 회의장 동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선이 전시장·컨벤션홀과 겹쳐져, 국빈·총수 방문 시 의전·보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처럼 회의장을 별도 분리하여 설계한 해외 사례도 존재하는데, 제3전시장 역시 회의장을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보임. 당초 계획 대비 회의장 규모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고양시가 제3전시장 건립을 통해 최대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함. ○ 제1전시장의 노후 시설 개선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잠실에 새로 조성되는 복합마이스센터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GTX 개통으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타 컨벤션센터로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됨. 또한 비가 새는 구간 수선 등 긴급한 시설 보완이 시급한 만큼, 전시장의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요청함. ○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을 활용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의 물품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활동과 태양광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기 바람. 향후 단계별 실행 계획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성과보고회에서 이재율 대표이사가 성과보다 ‘안전한 킨텍스’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직원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한 컨벤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고양산업진흥원	○ 고양시 ‘청춘창업소’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보도된 잡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업에 사전 전달된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제출해야 함. ○ 창업기업멘토링은 진흥원의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부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비춰짐. 상시 멘토링 및 기초 교육 등은 전문성 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 만큼, 진흥원 내부 전문 인력 확충 또는 계약직의 직영 전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주길 당부함. ○ 용역 계약 시 그 기업들의 창업성공률, 관내 창업 창출 규모 등 주요 성과지표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람. ○ ‘28청춘창업소 엑설레이팅 프로그램’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기존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지 우려스러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제품상용화지원사업 용역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 지원을 했다면 그 결과물이 추적, 관리가 되어야 하는 만큼, 성과관리 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해 보임. ○ 빅데이터컨설팅 용역의 경우, 25년도에만 3억 4,800만원의 큰 예산이 들어감. 수혜 기업들이 실제 경영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있는 관리 지표가 필요함. 최소 1년 단위로 사후관리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함. ○ 28청춘창업소에 입점한 ㈜라파덤 업체가 24년도 폐업함. 해당 기업에 대해 사전 건전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폐업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사업 실패 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절차 등이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건전성 평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장연임심의위원회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심의 과정에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심의 결과가 시의회에도 적절히 보고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함. 향후에는 심의 결과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에 지난 5년 동안 국비를 받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 없이 운영되다 보니 세미나 등 필수 프로그램 일부가 축소,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보임. 국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24년도 캐릭터 라이선싱쇼 상담액이 1,500억 원으로 집계되어 매우 큰 성과로 보여짐. 하지만 25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 및 발굴 효과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 등을 마련하길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산업진흥원이 예산 제약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산업육성 정책과 창업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굴·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임.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산업·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향후 2~3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양시 미래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해 제시해 주길 당부함. ○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제작사 스태프가 방문할 경우 활용되는 입주실·휴게공간·부대시설 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함. 시설 활용률과 지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사 완료 현황, 시설 운영 방식, 지원 실적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 넥스트창업팀이 타 부서 대비 인원이 많은 이유, 정원외 인원의 계약기간·근무 장소·업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 재단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대표이사 출퇴근 시간은? 대표이사의 유연근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근거 또는 규정은 무엇인지? 재단 내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직원 현황은? 대표이사가 유연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길 바람. ○ 대표이사가 오전 7시~9시 내 결재한 적이 있는지? 재단 내 직원들은 대표이사 근무 시간에 맞추어서 결재 및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대표이사 근무시간이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대표이사의 경우 모집공고 시 별도 거주 지역 제한이 없음. 그럼에도 업무용 사택 지원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유연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향후 대표이사 모집과 지원에 대해 고민해 주길 바람. ○ 운영본부장 최종합격 일자가 언제인지? 국제박람회재단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채용 절차는? 대외협력관 채용 절차는? ○ 2025년 7월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인사원칙을 신설하였고, 제25조 인사위원회를 개정하였으나 운영본부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임용된 건지? ○ 임원추천 및 채용과정이 다소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지 의문임. ○ 대표이사는 마이스가 무엇이고 마이스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 24년 11월 꽃박람회와 뷰로 통합을 위한 조례 제출 시 다소 미흡한 준비로 인해 부결시켰고, 올해 3월 보완한 조례 안건을 통합시켰던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조직이 통합 시 계획했던 조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경영팀은 기존 통합 계획 당시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 운영 본부에 속해 있는 사항은 최초 계획된 조직 구성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이스 얼라이언스 향후 계획은? ○ 현재 홈페이지가 꽃박람회재단과 다르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함. 꽃박람회와 뷰로 기능을 분리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하여 신속히 구성해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사관리 규정상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실시할 것인지? ○ 고양꽃전시관 사계테마정원 장미 개화 및 식재 관리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저조하게 보이므로 향후 자료 작성 시 오해가 없도록 작성해 주길 바람. ○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꽃박람회 성과용역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요구할 때 제출받음. 향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운영본부장이 생각하는 향후 운영 계획은? 내년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는 신속히 대비해 준비해야 함. ○ 가을꽃축제 오프닝 행사가 다소 무거우므로 좀더 세대 간 격차 없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당부함. ○ 2026년 꽃박람회 준비 상황은? 꽃박람회가 같은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음. 이에 따라 용역들을 다르게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 꽃박람회 입장권 가격 선정의 경우 재단 내부에서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가격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 2026년도 주제는 무엇인지? 주제에 부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길 바람. ○ 꽃박람회 행사 시 마이스 기능을 어떻게 접목시켜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고양시의 화훼, 원예를 위한 박람회, 특히 B2B가 중요함. ○ 꽃, 시간을 물들이다. 주제에 부합하게 환경을 담은 기획을 부탁함. ○ 꽃박람회가 2025한국소비자만족지수 축제부문 1위를 수상한 것을 축하 드림. 이를 새로운 동기부여라 생각하고 내년도 성과도 기대하겠음. ○ 2025년 성과조사 용역만 보아도 향후 개선사항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음. 2026년 꽃박람회 행사는 8월 부임한 운영본부장의 시험무대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 매년 꽃박람회 행사 시 동일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순 있지만 혁신을 위해서 신규업체 발굴에 노력해 주길 바람. ○ 성과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행사 기간임에도 꽃이 많이 시들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음.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오랜 기간 개최해 온 노하우를 통해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아야 함. ○ 꽃박람회 행사 개최 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 ○ 70억 가까운 예산 투입 대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날

관련부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내년 행사에도 펜스를 설치할 건지? 펜스 설치로 인해 호수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람. ○ 꽃박람회와 뷰로 통합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한 시기는? ○ 고양교육지원청과의 입장료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내년 행사 시 청소년(초・중・고) 입장료 책정 계획은? 청소년 입장료 책정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하길 바람. ○ 2025년 8월 22일 16:03에 사용한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내고향마트'에서 지출하였고, 16:21에 또 사용함. 사용한 이유는? 5월 8일 강릉집에서 2025 꽃박람회 업무협약식 추진을 목적으로 20명에게 6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주에 국군장병 40명을 대상을 40만 원의 중식을 제공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더욱 유의하여 쓰길 바람. ○ 2024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 만약 적발될 경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25년도 점검 여부 확인, 개선 요청 사항이 이전 내용과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 대표이사 기본급 인상 외 직원들의 급여 인상 현황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종합의견

□ 2025년도 환경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자족도시실현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3개 구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위원회 선정기관 9개 기관과 ㈜킨텍스, 고양산업진흥원,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 사전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위하여 2025년 9월 22일 고양백석체육센터, 쓰레기종량제봉투공급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선인장식물원, 장항습지생태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지역주민의 민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음.

□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수치가 부정확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감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작성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일자리재정국 감사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기능 강화,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정책의 시행 및 종료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고양시 청년의 정주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청하였음. 또한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사업, 작은 채용의 날, 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 등 수요가 확대되는

사업들의 사업량 확대와 안정적 예산 확보에 대해, 그리고 감정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심의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강화도 함께 주문하였음.

한편 고양페이와 관련하여 연초 반복되는 미지급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철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경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심의의 내실화,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등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하였음.

○ **기후환경국 감사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과 관련하여 목표 감축률 축소의 타당성과 언론보도의 정확성 검증, 사실 기반 홍보를 강조하였고 경기도 RE100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접근성 문제 및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성과 등의 보고를 요청하였음.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과정에서의 부서 간 명확한 협의체계 구축으로 행정 혼선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강조함. 전기차 보급 외에도 수소버스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또한 요구하였음.

송포・가좌・대화마을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악취저감 사업의 시 자체 사업 전환 등 적극적인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대책을 점검하였고, 자원순환가게 및 자원순환 활성화, RFID 음식물 감량 사업의 성과 격려와 음식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 검토 등을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점검, 열무축제 행사 시 상인회와의 협력 활성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청소 지원 용역의 현장코칭과 점검 강화 등 자발적 위생관리 문화 조성을 주문하였음.

○ **자족도시실현국 감사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초기 목표했던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분양전략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도 잦은 면적 축소 등 정책 방향이 빈번하게 변동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일관된 행정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주문하였음.

최근 고양시 매출 300억 원 이상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이 늘고 있는 점은 우려하며, 기업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음.

킨텍스의 감사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 평가항목의 합리성 검증,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과도한 비공개 관행 개선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고양시 MICE 산업 유치 및 행사실적의 감소 원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 고양컨벤션뷰로-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통합 이후 인력·채용·공간확충 등 통합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통합 이후 근무여건 악화 방지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EBS국제다큐영화제와 DMZ다큐영화제의 지원 예산 불균형 문제 제기,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음.

또한 UAM 산업 추진현황 점검, LIH 분원이 고양시에 가져올 실질적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요청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공릉천 인근 시금치 농가 등 수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환경 개선,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해 점검하였음.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의 경우 학교급식 관련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민원과 우려 해소 및 친환경 급식 시스템의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구산동 돈사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대체적 지원 방안 마련,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요청하였음.

○ **푸른도시사업소 감사에서는** 공원·하천·녹지 관리 전반에 대해 추진현황 점검, 제도 보완, 주민 편의 및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물놀이·피크닉 시설 및 특화공간은 향후 발물놀이터 및 유사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업과 사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성라피크닉장 이용 감소 원인분석 및 안내 강화, 마상공원 국궁시설의 체육정책과 이관 점검, 정발산 전망대 사업

특조금 활용 등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검토 및 정책결정을 요청함.

호수공원 내 반복 민원은 순찰·점검 실태와 인력 배치 적정성을 재점검 요청하고, 호수공원 자전거길, 학괴정 재건축, 호수공원 쉼카페 조성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함.

마지막으로 풍동천 취락지구 내 소하천의 반복 범람에 대한 문제 제기, 창릉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3개 구청 감사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반복 위반 업소 추적·강화 처분 체계 부재, 상습 위반업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개선방안을 촉구하였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동·고정 CCTV 운영 현황 점검, 친환경·전동식 청소기 도입으로 인한 청소원 업무효율·소음 개선을 촉구하였음.

또한 농지 불법행위 단속, 소나무 재선충 선제적 예방 활동 및 드론 활용 예찰 제안, 각 구청 환경녹지과 청소용역원의 휴게 공간 활용, 전정·제초·예초 작업 횟수 및 낙엽 정비 장비 소음 민원 등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 부서협업 등을 요청하였음.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는** 소각장 민원 처리 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애로사항 점검 및 광역소각장 추진 시 분산처리 대비, 바이오가스시설의 직원 애로사항 및 시설 악취 해결책 마련, 외부 방문·견학 대비 낙후 시설 보수 개선을 주문하고, 환경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음.

○ **킨텍스 감사에서는** 감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및 직무적합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인정보 미공개, 경력 은폐 등 의혹 해소를 촉구하였으며, 최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감사의 전문성에 대해 점검함.

또한 제1전시장 노후·누수 보수 문제, 탄소중립·태양광 등 ESG 경영계획의 구체적인 제시, 미화원·보안요원 복지 실태 점검 등 내실 있는 경영과 제3전시장 건립 관련 회의장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였음.

○ **고양산업진흥원 감사에서는** 28청춘창업소 엑셀러레이팅 예산 반감에 따른 대책 마련, 메이커스페이스 국비 종료 공백 최소화, 고양산업진흥원장 연임 심의의 독립성 확보 등을 당부하였고, '청춘창업소' 선정 잡음에 대한 사실 확인, 과도한 외부용역 지양 및 내부 전문인력 확충, 성과지표(창업성공률·제품상용화·빅데이터 경영개선) 활용으로 추진사업의 사후관리 철저를 요청하였음.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감사에서는** 임원추천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표이사 기본급 인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 제기, 홈페이지 개편 등을 촉구하였으며, 꽃박람회 입장권 가격 책정 점검, 2026년 꽃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MICE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관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외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급한 사안은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요구하고자 함.

나. 기관(부서별) 현황

부서별 \ 구 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합 계		**83**	
일자리재정국	**소계**	**21**	
	일자리정책과	13	
	소상공인지원과	5	
	세정과	2	
	징수과	0	
기후환경국	**소계**	**7**	
	환경정책과	2	
	기후에너지과	2	
	자원순환과	2	
	식품안전과	1	
자족도시 실 현 국	**소계**	**6**	
	경제자유구역추진과	0	
	기업지원과	3	
	전략산업과	2	
	미래산업과	1	
농업기술센터	**소계**	**6**	
	농업정책과	0	
	농산유통과	4	
	도시농업과	2	
	연구개발과	0	
푸른도시 사 업 소	**소계**	**18**	
	녹지과	4	
	덕양·일산공원관리과 공통	1	
	덕양공원관리과	3	
	일산공원관리과	5	
	생태하천과	5	
구청	**소계**	**14**	
	공통	4	
	덕양구청	4	
	일산동구청	0	
	일산서구청	6	
고양도시관리공사		**1**	
㈜킨텍스		**2**	
고양산업진흥원		**4**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5**	

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83건)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기능 강화 요구** ○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실질적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중단 과정도 심의·조정 없이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청년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청년기본소득 재개 촉구** ○ 청년기본소득을 실효성과 재정을 이유로 중단했다면, 대체 사업인 미래패키지의 규모·대상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기본소득 기능을 대체하기 어려움. ○ 청년기본소득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며, 일자리 정책만으로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촉구함.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기능 약화 시정** ○ 제284회 정례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며, 관련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결정된 바 있음. ○ 감정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심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지원 기능 강화 및 조례에 규정된 대로 감정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청년 정주환경의 체계적인 개선 요구** ○ 고양시 관내 취업 청년들의 정주여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요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함. ○ 특히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업과 현황 공유가 필요함.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량 확대 및 다양화 요구** ○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 비해 26개 사업·57명 규모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임. 사업 대상자의 필요를 반영해 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함.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성과 확대 요구**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그간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했으나 최근 라이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선제적인 예산 증액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사업량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작은채용의 날’ 참여업체 분야 확대 요구** ○ 작은 채용의 날은 규모가 작고 참여기업 수가 부족한 실정임. 참여 업체를 단순 미화·단기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선해야 함. □ **일자리 지원사업 이중수혜 및 특정업체의 반복 선정 지양** ○ 고양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부 업체의 보조금 중복 수혜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이유로 판단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특정업체가 지원사업의 중복수혜를 받거나 운영 카르텔을 형성하여 지원사업 및 보조금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 후 고용 유지 여부, 보조금 수혜 기업의 선발과정 강화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함. **□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프라 공사의 수의계약 지양** ○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방식이므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특히 연간 1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 시에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내일꿈제작소 운영방식 개선방안 모색** ○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방식이므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특히 내일꿈제작소의 경우 운영은 위탁하되, 청년활동가가 직접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직영과 위탁방식을 혼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청년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동노동자쉼터 과밀문제 해결을 위한 쉼터 추가 설치 등의 검토 필요** ○ 장항, 화정 이동노동자쉼터는 수용인원 대비 과밀 사용으로 휴식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현장 점검 후 환경개선 또는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함. **□ 노동권익센터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필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노동권익센터 수탁기관 변경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고양시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노동권익센터 상담·권리구제 기능 과부하 시정** ○ 청취다방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권익센터가 이사한 후에 노무사 1명이 상담 건수만 371건을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전담인력 부족, 업무용 차량 미확보 등 노동자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 인력 증원, 업무용 차량 지원, 예산 구조 정상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자리재정국 **(소상공인지원과)**	**□ 고양페이 예산 및 추진 방향 시정** ○ 고양페이 예산·추진 현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연초 인센티브 미지급 등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연·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됨. ○ 인센티브 충전 한도가 경기도 최저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아, 실제 수요와 소비 패턴을 반영한 한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고양페이와 관련한 누리집 정보 접근성이 낮아 고양페이 가맹점 현황, 고양페이 사용관련 공지, 인센티브 한도 등 필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함.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가시적 성과 및 홍보 요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홍보 부족으로 상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지역 내 현수막 설치에 의존하는 등 홍보 방식이 매우 제한적임. ○ 구청 게시대, 현수막,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인들이 제도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요구** ○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기반 확장을 위해 전문성 강화, 고용불안 해소,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함. ○ 현재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 로드맵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과정과 성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쇠퇴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공작물·조형물 설치, 야간조명 등 유지보수가 필수적인 사업은 초기 설치비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 공실률, 상권 축소 규모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구 단위 지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각 구 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 마련, 참여 인센티브 제공, 구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협력 체계 구축을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요구**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의 충실성을 위해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평가자료 제공이 심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고양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체계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함. □ **고양시 금고지정 기준의 명확화 및 객관성 확보 요구** ○ 현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정량·정성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 요소와 배점이 수치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정성평가는 평가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 금고지정 과정에서 이견과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정량·정성 항목 모두 배점, 평가 방식, 가중치를 명확히 수치화해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재지정 시에도 동일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산정·검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금고지정 결과의 평가 근거 공개와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함.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탄소중립·녹색성장 목표 조정의 타당성 및 정보공표의 책임성 강화 요구** ○ 고양시는 예산 한계를 이유로 경기도 감축 목표 40%를 36%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목표 축소가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감축 목표 하향은 기후 대응 후퇴로 비춰질 수 있어 시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홍보·보도 표현 관리가 중요함. ○ 목표 조정만이 아니라 실천사업, 시민참여 모델, 지역 기반 감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향후 목표 설정·조정의 근거와 검증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신뢰성과 시민 이해도를 높여야 함. □ **장항습지 생태교란종 확산 대책 요구** ○ 장항습지 등에서 생태교란종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시의 대응 현황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 교란종 제거를 5~10월에만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고, 조기발견 및 제거 체계가 마련돼야 함. ○ 사후관리 계획·점검 결과·재확산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기후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경기도 RE100 사업 홍보 및 지원체계 점검 요구** ○ 경기도 RE100 사업(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은 시민 참여 확대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담당부서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홍보·안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동일 사업을 추진 중인 파주시와 비교했을 때 행정 지원 절차·신청 편의·민원 대응에서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여, 고양시의 추진 사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태양광 사업의 과도한 행정 복잡성 시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라면, 복잡한 사업 체계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안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 특성·인구 구조·주거 환경에 맞춘 '고양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직매립 금지 대비 광역 소각장 설치 등 대책 마련** ○ 환경부의 2026년 1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고양시는 명확한 폐기물 처리 대안을 제시해야 함. ○ 김포·파주와의 광역 협의가 장기간 진전 없이 지속되고 있어 현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그럼에도 자체 소각장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정책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큼. ○ 소각장 설치 관련 명확한 추진 방향, 일정 제시, 주민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원순환가게 감소 원인파악 및 활성화 요구** ○ 자원순환가게가 26개에서 15개로 줄어든 후에도 자원 회수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운영 효과를 점검해야 함. ○ 일본 사례처럼 센터형 모델을 도입하여 다양한 자원 순환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해,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기후환경국 (식품안전과)	□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 ○ 음식문화특화거리 조례 제10조의 지원사업이 형식적 추진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내실화해야 함. ○ 특화거리 조형물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민이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디자인과 콘셉트의 내용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올해 진행된 용역이 단순 결과 보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실제 활성화 대책으로 연계·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우량기업 이탈 방지 및 관내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요구** ○ 최근 고양시에 위치한 우량기업 특히 매출 300억 원 이상 기업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임. ○ 단순 방문·일회성 대응이 아닌 인센티브, 입지·행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치·정착 전략을 갖춘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업 현황 관리, 지원 방향, 성과 분석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DB 구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업 현황 파악-지원-관리-성과평가를 한 흐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고양시 우량기업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성장을 지원해야 함. □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충 요구** ○ 기업들과 소통하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고양시를 떠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유치와 정착은 지역 일자리·세수·산업 생태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입지·행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관리 철저 및 기업유치 실적 강화** ○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입주 가능 업종 확대를 통해 일부 입주율이 개선되었으나, 이는 제한적 효과에 그치고 있음. ○ 단순한 제도 조정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 투자 안내, 맞춤형 지원 등 행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 및 예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기업과의 협의·간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족도시실현국 (전략산업과)	□ LIH 분원 유치성과 및 고양시 연계 전략 마련 ○ LIH 분원 유치가 고양시 의료·바이오 산업에 어떤 구체적 성과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지 명확히 제시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증명해야 함. ○ 국립암센터의 데이터 역량을 고려해, 분원 유치에 대한 공식 입장·협력 의향·연계 가능성 등을 시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유치와 의료데이터 산업 활성화와의 시너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제 고양시 기업 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실행 구조와 계획을 마련해야 함. □ 킨텍스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절차 시정 ○ 3월 31일 주주총회 안건이 영업보고·감사 선임 등 핵심 경영사항임에도 시장 결재 없이 처리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임. ○ 2021년 이후 동일한 결재 누락이 반복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내부 결재 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매우 부적절함. ○ 2020년 4월까지는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약 5년간 결재 문서 없이 쪽지보고로 대체된 것은 규정 위반이며, 특히 감사 선임과 같은 중대한 안건을 결재 없이 처리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임. ○ 향후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의사결정은 전결규정·사무처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해 정식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적 처리 관행은 즉시 개선되어야 함.
자족도시실현국 (미래산업과)	□ DMZ다큐영화제 예산 축소 대책 마련 ○ EBS국제다큐영화제는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DMZ 다큐영화제 예산은 전액 축소된 상황임. ○ 두 사업 모두 평화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공유하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문화사업인 만큼,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함. ○ 이에 단절이 아닌 공동 지원·병행 지원·연계 프로그램 등 대안적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축소 우려 대책 마련** ○ 친환경 농산물 지원액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삭감되었으나, 학부모·영양사·친환경 농가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어 불안 확산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감소는 판로 축소 등 지역 농가 생존과도 직결되는 만큼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예산 확충과 친환경·지역농산물 중심의 급식 체계 및 급식 질 유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 함. **□ 동물교감 치유문화제 운영 활성화** ○ 동물복지 선도 도시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 ○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중인 동물 관련 지원 업체에 대해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최초·단독 개최 행사임에도 시민 관심도가 낮아, 홍보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됨. ○ 행사가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유기동물 자연사·안락사 사후관리 철저 요구** ○ 2023~2025년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건수와 관련해, 유기동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 차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유기 반려동물의 입양 및 기증 과정에서, 기증 단체를 거쳐 개인에게 입양되는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기증 단체가 유기동물을 입양 보낼 때 사진 등 증빙자료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통한 사후 확인 체계를 마련하여, 입양 이후까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함. ☐ **돈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돈사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시 차원의 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점검 및 개선 요구** ○ 임대사업 운영 시 농민들의 현실과 시각에 맞춘 운영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용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검토 및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마두역 스마트팜 실증사업 제도개선 요구** ○ 마두역 스마트팜 실증사업이 단순 시범에 그치지 않고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실증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문제점·기술 결과를 시민·농업인·기업과 공유하여, 확산 기회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청함. ○ 향후 스마트농업 정책과 연계해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을 당부함.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폐기물 처리시설 위법행위 방치 및 관리부실 시정** ○ 인선ENT는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 영업 초기부터 불법 산지전용으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됨. ○ 2022년~2026년까지 5단계 복구계획을 제출했으나, 2025년 말 현재 3단계조차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특히 2023년 5월 18일 고양시장에게 2024년까지 전면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녹지과는 계획 불이행에 따른 점검·행정조치·제재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정당한 관리·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감독 권한을 방치하고 있음. ○ 이에 불법 전용과 복구 지연에 대한 조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강력한 관리·제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함. **□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 변경 추진사항 경과보고 요구** ○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가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현장 방문을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농경지 확보와 보전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농업 기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농경지 확보, 토지 이용계획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 건의** ○ 원흥동 563-10, 563-12번지 일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사 구간으로,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해당 구간에 야자매트를 설치함으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함. **□ 쌈지공원 조성 건의** ○ 성사동 425-1, 425-2번지 유휴부지의 쌈지공원 조성 요청과 관련한 추진 현황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음. 해당 부지는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시 시민들의 일상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따라서 유휴부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함.
푸른도시사업소 (덕양·일산공원관리과)	□ 청소용역원 휴게소 관리 철저 요구 ○ 현장 휴게공간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아 용역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환경녹지과 용역원이 공원관리과 휴게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휴게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해 용역원들의 휴식과 근무환경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공원관리과는 2026년까지 이전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 국궁시설 이관 재요구 ○ 마상공원 내 비호정 국궁시설의 관리 주체 이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체육정책과로의 이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이는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궁시설 관리 업무가 적정 부서로 원활히 이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성라피크닉장 주차장 확보 요구 ○ 최근 성라피크닉장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주차장 예약과 피크닉장 예약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이를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인지하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의 이용자 불편 상황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시는 주차장·피크닉장 예약 시스템의 분리 운영을 명확히 안내함으로, 불법주차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양생태공원 현장점검 및 신속한 보수처리 요구** ○ 최근 고양생태공원 내에서 호우 시 돌길이 유실되고, 데크가 파손되는 등 안전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 ○ 방문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함. ○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및 위험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 조치를 마련하고,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 개선·구조물 보강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 정발산 전망대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 요구** ○ 주민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추진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음. 절차 진행 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임. ○ 도비 확보만을 근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 등 장기적 예산 부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비 환수나 패널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 6~7월 의견조사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 타 지자체 전망대 설치 사업의 중단 사례를 고려해 동일한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예산 낭비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함. □ **북카페(쉼카페)사업 일관된 추진 및 시정** ○ 호수공원 북카페 추진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쉼카페로 변경 추진되었음에도, 공립 작은도서관 사업과 중복된다는 기존에 발표된 입장문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시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입장문이 삭제되었지만, 작은도서관 폐지 보도자료에는 여전히 ‘사업 중복’ 표현이 남아 있어 시의 공식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시민들의 오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두 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시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 문서를 전면 재검토하여 입장문 발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통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함. □ **호수공원 자전거길 분리안 확정 요구** ○ 호수공원 자전거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구체적 검토 등 진행상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음.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동선과 자전거동선의 명확한 분리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시는 자전거길 분리안의 방향을 조속히 확정함으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 현장 상황을 반영한 동선 분석, 안전성 검토, 시설 배치 최적화 등을 위해 전문용역 추진 등을 통한 과학적·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호수공원 「학괴정」 재건축 추진 건의** ○ 쉼카페 건축, 선인장 식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공원 내 주요 시설들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학괴정」 또한 상기 사업의 추진 일정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호수공원 내 조형물 설치 방법 개선** ○ 호수공원 화장실 전망대의 자전거 조형물에 대해 이용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음. 향후 조형물 설치 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설치되어야 함. □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대책 마련** ○ 호우 시 창릉천 지역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수 공간 등 현실적·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하천 정비에 힘써야 함. ○ 2022년 국가 통합하천사업 공모 당시 지방하천 지원 기준에 해당했는지, 가능성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24년 환경부의 국비 지원 불가 통보 이후 고양시의 대응 내용과 불가 사유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 ○ 보도자료에서는 ‘국가 세수 부족’이 이유로 언급되었으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판단 근거가 공유되지 않아 주민 혼선과 불신이 지속된 상황임. ○ 환경부·경기도 등 상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하천 승격을 단순 대안처럼 제시하는 데서 벗어나 승격의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지원 환경단체 관리의 투명성 강화** ○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 환경활동과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의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닌, 사업 목적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보조금의 목적과 효과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야 함. ○ 전문 환경단체와 단순 정화활동 중심 소규모 단체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단체별 역할과 역량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점검, 참여도, 지역사회 반응, 장기적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함. **□ 공릉천 발물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 ○ 공릉천 발물놀이터는 개장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호우 대응과 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 개장 당시 임시운영 안내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개장식 이후 현장 상태는 이끼가 가득한 물, 안전·위생 관리 미비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앞으로는 개장식과 같이 보여주기 행정에 치중하지 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 관리·안전점검·운영계획 수립 등을 선행해야 함. **□ 풍동천 범람 방지책 마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3개 구청 (공통)	○ 풍동천 뒤편 취락지구 내 소하천은 여름철 호우 시 반복적으로 범람하여 인근 주민들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즉각적인 정비 및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시는 해당 소하천의 정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침수·범람 위험을 줄이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개선, 하천 단면 정비, 구조물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함. **□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점검 철저** ○ 관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주기와 점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점검 시기가 매년 일정하여 예측 가능한 점검 구조라는 점에서 점검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시는 점검 방식과 주기를 다양화함으로, 실제 이용 환경과 농약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골프장 내 농약 구매·사용 현황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 도입 적극 검토 요구** ○ 용인특례시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 도입한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는 100% 전기 충전 방식으로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으며, 환경미화원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어 작업 편의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음. ○ 고양시 또한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거리 환경 개선과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해당 장비의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이동식 감시카메라) 단속 실효성 확보** ○ 사전 계도와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 감시원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단속 효과가 낮은 상황임. ○ 이동식 CCTV가 운영 중임에도 비(非)아파트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반복되고 있어, 현 시스템은 예산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임. ○ 무단투기 지속 사례를 고려해 CCTV 설치 구역과 운영 방식 전반을 주민 민원 유형과 실제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함. ○ CCTV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무단투기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등 지역 조직과 연계한 활동 추진,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내 확대 등 예방 대책 또한 필요함. 지역 맞춤형 대책 필요.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계도 목적의 현수막 게첨 수량 확대도 필요한 대책임. □ **상습·악질 위생위반 업소 근절대책 마련** ○ 점검 인력이 부족해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재 처분 방식이 과태료·영업정지 등 동일 패턴에 머물러 실질적 관리 효과가 낮음. ○ 반복 위반 업소가 폐업 후 업종·상호만 바꿔 재영업하는 사례,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중대한 위반을 추적·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함. ○ 반복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위반 일시 기록을 명확히 하고, 중대한 위반 업소는 6개월 이후에도 지속 관찰·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습·수시 점검 도입, 폐업 후 재개업 업소 집중 단속,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덕양구청	필요 시 ‘수시 관리 대상’ 지정 등 재발 방지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지속적인 제초 및 가로수 정비 요구** ○ 최근 관내 전정작업·제초·예초 횟수가 감소한 것 아니냐는 주민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도시환경과 공공녹지의 품질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유지되는 만큼, 관리 횟수 감소는 시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시는 연간 작업 계획과 실제 수행 현황을 점검함으로, 제초·전정·예초 작업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확보를 추진해야 함. □ **내실 있는 창릉천 코스모스(유채꽃) 축제 진행 요구** ○ 2017년부터 자연보호협회·마을협동조합 등이 주도하며 성장해 온 코스모스 축제가 2025년 외부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본래 취지와 의미가 약화되고, 행사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 ○ 예산은 동일함에도 사업 내용이 축소된 것은 ‘마을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위탁을 추진하더라도 주민 소득·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강화 등 사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주체 선정이 필요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이 요구됨. □ **창릉천 일대 오·폐수 유출 의심 현장 점검 요구** ○ 창릉천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오·폐수가 흐르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어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이에 따라 생태하천과와 환경녹지과의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오염원 조사, 필요 시 오염원 차단·정화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함.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청. **□ 소나무 재선충 피해 면적 추세 파악 및 예찰 강화** ○ 소나무 재선충 피해 면적의 최근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가 시급함. ○ 특히 드론을 활용한 예찰 등 다양한 관측·모니터링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정류장 인근 사유지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해결방안 마련** ○ 정류장 인근 사유지 내 담배꽁초 대량 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 안내 강화·흡연구역 정비·민원 연계 관리 체계 마련 등 종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일산서구청	**□ 악취 문제 시정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구산동 인근 돈사의 악취민원 관련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악취민원 해소의 시급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일산서구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과 함께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마련할 것을 요청함.
일산서구청	□ **장원평촌 인근 가로수 전지작업 즉각 시행 요구** ○ 장원평촌 인근에서 차도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가 아래로 처지면서, 농기계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긁히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사고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신속한 전지작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함. □ **대화천 교량하부 경사로 파손 등 복구사업 요구** ○ 대화천 도로 다리 하부 경사로의 타일이 일부 깨지고 패여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됨. ○ 미끄러짐·전도 사고 등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정비를 요청함. □ **농지 성토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대책 마련** ○ 최근 농가의 성토 작업 증가로 우천 시 흙이 배수로를 막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성토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함. ○ 특히 일산서구 가좌동은 지형상 토사 유출 시 대규모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됨. ○ 파손된 농로는 즉시 보수가 필요하며, 우천 시 흙탕물로 파손 구간 확인이 어려워 차량·농기계·보행자 통행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지역 배정 점검, 관리·감독 강화** ○ 농지실태조사 기간제 조사원 모집 시 지원 규모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일부 조사원들이 동일한 지역을 반복 실태조사하면서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는 만큼 조사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고양도시관리공사	□ **주엽역 광장 나무 데크의 반복 하자보수 시정** ○ 계절마다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보증기간 경과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 구청 차원의 구조적·근본적 대책이 요구됨. 재시공·구조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반복 보수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함. ○ 반복 하자로 인해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공업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적용 가능 여부를 즉시 점검해야 함.
	□ **백석소각장 내구연한 도래 시 대책 및 안전관리 강화** ○ 백석소각장은 내구연한 도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대체 폐기물 처리 대책과 시설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 시설 노후화에 따라 근로자 안전·건강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보호장비 확충 등 직원 안전 대책이 필요함.
㈜킨텍스	□ **감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책임성 강화 요구** ○ 킨텍스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이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서류심사 단계에서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선임이 과연 공정한 결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고려할 때, 감사 당사자 스스로 감사직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인식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감사 서정 절차와 각종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검증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투명한 조치를 요구함. **□ 킨텍스 감사결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적정성 검증 요구** ○ 킨텍스 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의 중대성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은 감사 기준 부재 또는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드러냄. ○ 사후 연차 승인 기준이 불명확하고, 승인 지연 시 해당 일자가 연차인지 결근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한 점은 감사 결과의 타당성을 크게 훼손함. ○ 해외출장 보고서 미제출·미공시 등 기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감사가 최소한의 점검 기능조차 수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임. ○ 감사는 기관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견제 장치인 만큼, 형식적 보고를 중단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해야 함.
고양산업진흥원	**□ 임기제/계약직근로자 등 정원 외 근무자 채용 실태점검** ○ 고양산업진흥원의 임기제·계약직 등 정원 외 근무자 다수 채용(총 22명)으로 인사 불투명성과 조직 효율 저하가 우려되며 정원 관리 강화와 투명한 채용 기준 마련을 촉구함. ○ 임기제·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의 과도한 활용으로 상시·지속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계약기간·근무 장소·업무 등이 불확실해지므로 상시사업 및 계속사업의 경우 정규직화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원 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부서별 통합된 공간과 사무실 등 근무장소 확보가 필요함. **□ 고양산업진흥원 주요사업 홍보 및 소통강화 요구** ○ 고양산업진흥원 사업은 시민과 적극 소통·공유하며 고양시 거주 예비 창업자나 신생 기업이 올바른 성장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금·인력·공간 등 기본 인프라와 종합적 지원을 제공해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팅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에 발맞춰 고양시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양산업진흥원이 창업컨설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 지원과 홍보에 힘써야 함. **□ 고양시 청춘창업소 운영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 시정** ○ 청춘창업소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잡음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함. ○ 선정 기준, 평가 방식, 심사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만큼, 운영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됨. ○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평가 기준과 배점, 심사위원 구성, 심사 결과 등을 명확히 공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더불어 선정 이후에도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정 운영 시 개선 또는 교체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 고양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확립 요구 ○ 산업진흥원이 설립 목적에 비해 지원사업 집행 중심에 머물러 기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 정책·전략 기관인지, 단순 사업 수행 기관인지 기능 정의가 불명확해 조직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 분석, 전략 수립, 정책 제안 등 핵심 기능 강화 방안과 성과 지표·중장기 로드맵이 미흡한 상황임. ○ 산하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전략적 조정보다는 행정적 연결 수준에 머물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기관의 정체성과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인력·사업·성과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꽃박람회 운영 혁신 및 신규업체 발굴 요구 ○ 매년 꽃박람회 행사 시 동일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은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앞으로는 신규 업체 발굴과 다양한 운영 주체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꽃박람회가 더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마이스(MICE) 기능 인식 및 조직 운영의 적정성 점검 요구 ○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의 현재 조직 운영은 당초 통합 시 제시했던 조직 구성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특히 경영팀은 초기 계획에서는 분리 운영 구조였음에도, 현재 운영본부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어 조직 목적과 기능 배치 측면에서도 적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통합 취지와 운영 효율성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 구조는 개선하는 등 조직 재정비 검토도 필요함.

관련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내용
	○ 꽃박람회와 컨벤션뷰로가 형식적으로는 통합되었으나, 통합의 핵심 목표였던 MICE 시너지·콘텐츠 연계·전략적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홈페이지 관리 등 통합 이후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함. □ 마이스(MICE) 분야 전문 인력의 확충 요구 ○ MICE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전문 인력의 집적과 협업 체계 구축이나, 현재 인력 부족으로 역량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상황임. ○ 국제 전시·컨벤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실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 재배치와 인력 충원 계획이 필요함.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함. ○ 신규 인력 확보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꽃박람회 개최로 인한 시민 불편민원 등 사전조치 요구 ○ 꽃박람회 개최 시 펜스 설치, 주차·교통 혼잡·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입장료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과 실행 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보고가 필요함.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인사 및 채용과정 시정 ○ 최근 임원 채용 과정이 다소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준수와 검증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 없음

8. 주요 근거서류: 없음